

지식 경제 정착을 위한 과제

21세기에는 세계 경제 사회 구조가 ‘지식 사회’ 또는 ‘지식 경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정설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는 일찍이 피터 드러커와 같은 미래학자들의 ‘핵심 생산 요소론’에서 비롯되었다. 앞으로는 정보와 지식이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생산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OECD와 세계은행이 지식 경제론의 선도자가 되었다. 세계적 경제 기구들이 ‘지식 기반 경제’라는 개념으로 선진국 경제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 발전을 지식의 관점에서 해석함에 따라 ‘지식 경제론’은 21세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식 경제를 주요 국정 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재경부는 ‘지식 기반 강화 계획’과 같은 정책을 구상 중에 있고, 산자부는 지식 산업 육성책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정부 각 부처는 제각기 지식 기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정책 구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은 물론 학계와 연구계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고 있다. 지식 경제에 대한 열기를 지켜보면서 언뜻 연상되는 것이 ‘세계화’에 관한 논의 과정이다. 한때 세계화는 우리가 나아갈 절대 명제로서 온 사회를 들뜨게 하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성급한 세계화 논의와 졸속의 정책 추진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준 점이 적지 않다. 세계화는 미래 사회를 예견하는 매우 유용한 개념이며 지식 경제론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논의 과정과 정책 추진 방법의 미숙으로 ‘세계화’ 개념은 이제 유용성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다.

지식 경제론도 한 때의 유행으로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에서이다. 단시간 내에 달구어졌다가 한순간에 식어버리는 ‘냄비 성향’이 지적 논의 과정에서만큼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 경제론이 보편화되어 이것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형으로 정립되고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첫째, 무엇보다 지식 경제에 대한 보편적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 지식 경제의 출현 배경과 이의 의미가 기존 개념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이의 특성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뜻과 의미가 분명해야 비로소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개념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주도의 개념화는 적극적으로 피해야 한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되거나 일방적으로 개념이 정립될 때 아무리 좋은 개념이라도 보편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까닭이다. 국내외 학자, 정부 및 민간 연구기관, 관련 단체들을 포괄하는 ‘연구 포럼’을 조성하여 이를 통한 개념화 작업과 심층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셋째, 정책 추진을 절대 서둘러서는 안된다. 분명한 개념이 정립되고 이에 토대를 둔 정책 방향이 구체화된 후 세부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이의 당위성이 분명해지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며 국민 일반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모든 부처에서 제각기 지식 경제 정책을 구상하고 발표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존 정책과 구별되지 않는 것과 부처간 중복되는 면도 포함되어 있다. 예산과 정력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좋은 것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애정을 갖고 많은 공력을 들여야 한다.